

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 유예 국회 논의의 전제는 50인(억)미만 사업(장)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2조원 이상의 예산 집행입니다.

- 윤석열대통령이 오늘 「중대재해처벌법」 50인(억)미만 사업장 적용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 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50인(억)미만 사업장 적용이 열흘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야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입니다.
 -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인(억)미만 사업장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법 적용을 준비하고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.
 - 특히,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%가 50인(억)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, 영세기업들이 고금리·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석열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

-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 「중대재해처벌법」 50인(억)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논의의 3대 전제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.
 - 법 시행이후 법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계자 문책,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향후 구체적 계획과 지재정지원 방안, 유예 이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, 3가지 였습니다.
 -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 중 지켜진 것은 경제단체가 억지

추향식으로 발표한 공동성명 뿐이었습니다.

-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대책 역시 기존 정부정책 발표를 짜깁기하고 기존 예산안에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했습니다.
- 오늘 윤석열대통령은 국회에 적용유예법안의 처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 공식사과를 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된 50인(억)미만 사업(장)의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했어야 합니다.

□ 민주당은 다시 요구합니다.

- 윤석열대통령이 진정으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50인(억)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,
- 하나, 50인(억)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집중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예산·조직 확보방안, 출범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.
- 둘째, 50인(억)미만 사업(장)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, '24년 현재 50인(억)미만 사업(장)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1.2조원을 2조원 이상으로 확보하고, '24년내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.
-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민주당은 「중대재해처벌법」 50인(억)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2024. 1. 16.


더불어민주당
정책위원회 의장 이 개 호